

제63권(2009. 12. 16)

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 동 원 박 혜 진

요 약	1
1. 머리말	3
2.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 변화	4
3.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14
4. 식품안전과 소비, 농촌관광 수요	19
5. 주거환경과 복지수준 인식	24
6. 시사점	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김동원** 부연구위원 02-3299-4227 dongweon@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히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2009년에도 10월부터 두 달간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특히 농업인과 도시민 등 기존 조사대상 그룹에 처음으로 전문가 그룹까지 포함하여 농업·농촌과 관련된 폭넓고 균형있는 여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시민 1,500명, 농업인 906명, 전문가 64명 연인원 2,470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그룹 간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정책방향과 기대를 표출하였다.

도시민 10명 중 9명(89.3%)이 국가경제에서 앞으로도 농업이 중요하다고 지지했으며, 10년 후 한국농업 전망은 전문가 40.6%, 도시민 30.0%, 농업인 20.2%가 희망적이라고 응답했고, 10년 후 농촌생활은 전문가 53.2%, 도시민 37.3%, 농업인 25.0%가 긍정적으로 전망해 전문가와 농업인 간에 2배의 인식차이를 보였다.

국민들은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도시민 10명 중 6명 정도(61.1%)가 농산물 시장 보호론을 옹호했지만 전문가 그룹은 20.4%만 찬성해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였다.

도시민 응답자 58.6%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는 50.3%가 찬성하여 최근 몇 년새 다원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답보상태에 있다.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29.1%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 악화를 꼽았다. 농업인으로서의 직업만족도는 200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32.1%)에 진입하였다.

농가의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생산비 증가를 가장 많이(32.0%) 꼽았으며, 인력 부족(19.5%)도 주된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농업인과 전문가

과반수 이상, 도시민 10명 중 4명(39.8%)이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2009년 중점 추진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가나 농업인 모두 한식 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수출확대를 성과가 높은 분야로 꼽은 반면, 농가 경영안정에 관한 정책은 가장 성과가 낮은 분야로 지목하였다.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로 농업인은 연금지원과 직접지불제 확대를, 전문가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인력육성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중심의 투자에 관심을 가져 농업인과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다만 투자를 축소해야 할 분야로 농업인이나 전문가 모두 전업농을 위한 영농규모화 지원을 꼽았다.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소득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 그룹은 후계인력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해 역시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도시민 83.8%는 국산농산물이 중국산이나 개도국 농산물과 비교해 훨씬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시행 1년이 경과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이 시행초기 조사('08.10)결과보다 11.8%p 상승한 57.2%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다.

귀농 의향을 밝힌 도시민은 응답자 2명 중 1명꼴(53.0%)로 나타났으나 5년 내 실현하겠다는 도시민은 3.8%에 그쳤으며, 귀농의향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귀농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수입원(33.2%)과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13.8%), 이주비용(12.2%), 귀농프로그램(11.7%) 등을 꼽았다.

거주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에서 도-농 격차는 좁혀지지 않아 그 차이가 전년도와 비슷한 각 19.4%p, 7.5%p를 나타냈으나,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민 중 농촌지역 복지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비율은 63.4%로 4년 전에 비해 1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머리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국민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해 정책수립과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여론과 변화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2년간 시행된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수요는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소비자인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를 찾아내고 생산자인 농업인의 농업·농촌 문제 인식과 정책평가 및 의식변화를 살펴보았다.

조사는 2009년 10월과 11월 도시민 1,500명, 농업인 906명(유효표)을 대상으로 도시민은 방문면접을, 농업인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농업계와 비농업계 전문가 64명을 조사에 포함해 균형있는 여론형성과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¹⁾.

조사 내용은 농업·농촌 가치 인식과 의식변화, 농업정책 평가와 요구, 식품안전과 소비, 농촌 생활여건 등이며 이 자료에서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결과만을 정리하였다.

<표본 선정과 응답자 현황>

- 도시민(면접 1,500명): 전국 읍면단위 이상 16개 광역시도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 할당표본추출로 표본 선정, 1:1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2.5%p>
- 농업인(응답자 906명): 당 연구원 전국 현지통신원 2,000명 대상 우편 조사
<당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연구활용 목적으로 구성된 농가로, 각 특성별 분포는 농촌사회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전문가(응답자 64명): 농업계 및 비농업계 학자와 연구자 380명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64명)의 76.5%가 농업계 전문가로 분류됨

1) 이 조사는 197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06년부터 도시민을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조사로 확대했고, 2009년 전문가 그룹을 추가하였다. 연구활용이라는 조사목적에 부합하고 과거 조사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여론조사와 패널조사를 병행하였다.

2.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 변화

2.1. 도시민 10명 중 9명 “국가경제에서 농업 앞으로도 중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는 도시민(89.3%), 전문가(87.5%), 농업인(76.9%) 순으로 나타나 농업인과 전문가보다 도시민이 농업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2006년 조사결과²⁾에 비해 중요성 인식은 소폭 상승(도시민, 농업인 각 0.9%p, 4.8%p)하였다.

표 1.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2006년		2009년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81.4(1,221)	60.2(516)	72.4(1,087)	61.9(561)	79.7(51)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7.0(105)	11.9(102)	16.9(253)	15.0(136)	7.8(5)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3.3(49)	10.2(87)	4.5(67)	10.2(92)	4.7(3)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8.3(125)	16.7(143)	6.2(94)	12.4(112)	7.8(5)
모름/무응답	-	1.0(9)	-	0.5(5)	-
합계	100.0(1,500)	100.0(857)	100.0(1,500)	100.0(906)	100.0(64)

2.2. “10년 후 한국농업 ‘희망적’” 전문가가 농업인의 2배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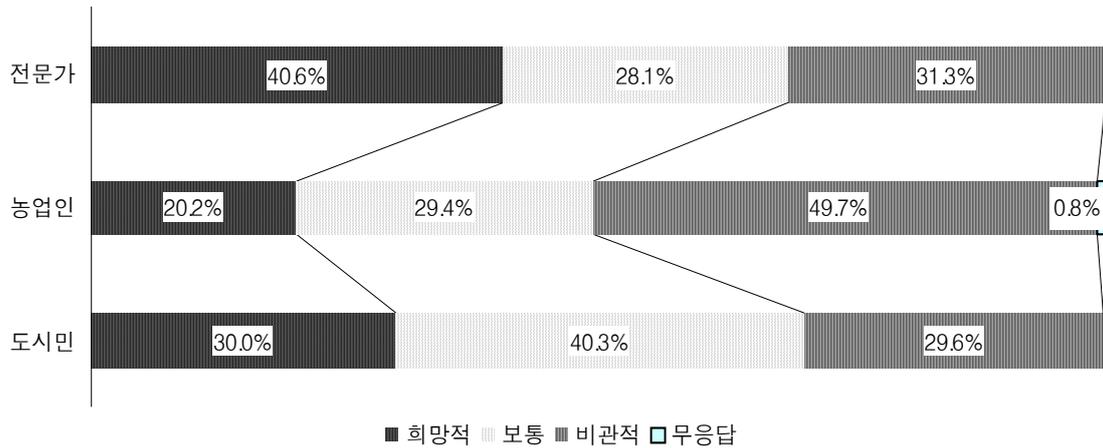
10년 후 한국농업의 전망에 대해서 희망적이라는 응답이 전문가 40.6%, 도시민 30.0%, 농업인 20.2%로 전문가 집단에서³⁾ 긍정적인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2006년 10월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3) 200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처음 도입한 전문가 조사는 회수률이 낮고(16.8%) 응답 전문가의 23.5%가 비 농업계 전문가라는 점을 조사결과 해석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긍정적인 전망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이 2배가 넘어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해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식변화를 위한 비전 제시 등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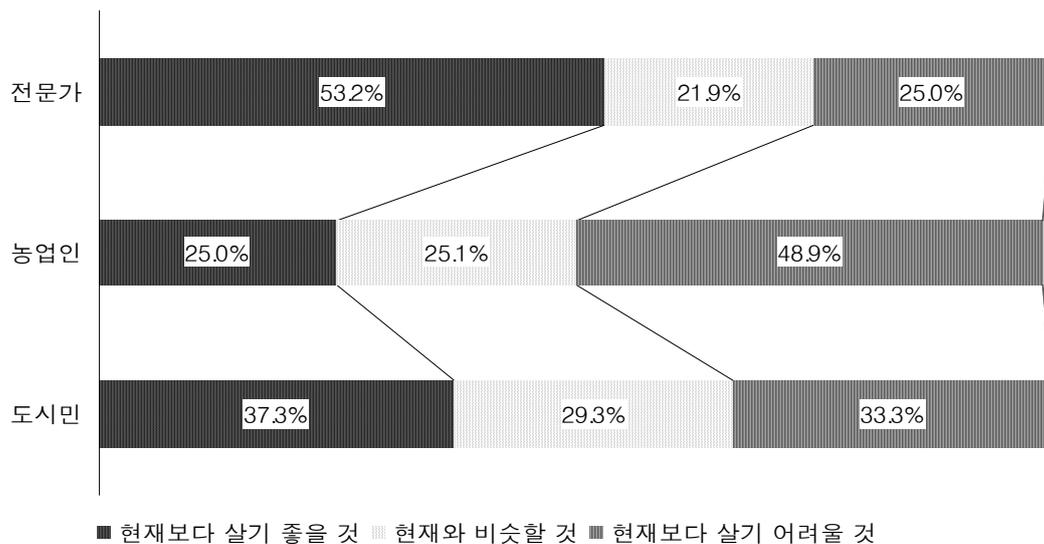
그림 1. 10년 후 한국농업 전망



2.3. 농업인 4명 중 1명만 “10년 후 농촌생활 나아질 것” 전망

10년 후 농촌생활에 대한 전망에서는 현재와 비교해 지금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문가 53.2%, 도시민 37.3%, 농업인 25.0%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뚜렷하였다.

그림 2. 10년 후 농촌생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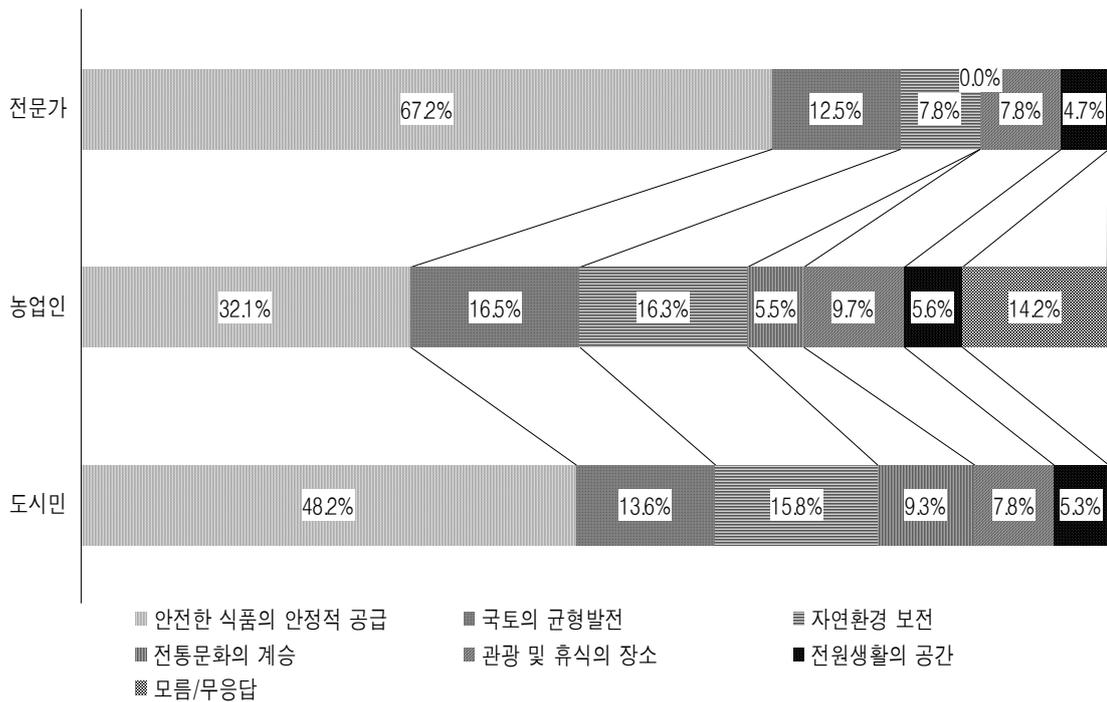


2.4. 농업·농촌 역할 ‘안전한 식품 안정적 공급’ 1순위 꼽아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1순위 기준) 중 중요한 역할로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모두 현재나 미래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꼽았다. 식량공급 기능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으로는 도시민은 현재나 미래 모두 자연환경 보전을 꼽았으며, 농업인은 현재나 미래 모두 국토 균형발전을 꼽았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미래에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능이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67.2% 달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식량공급기능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식량공급 기능 다음으로 현재나 미래 모두 국토균형발전을 꼽아 농업인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미래에 중요해질 농업·농촌 역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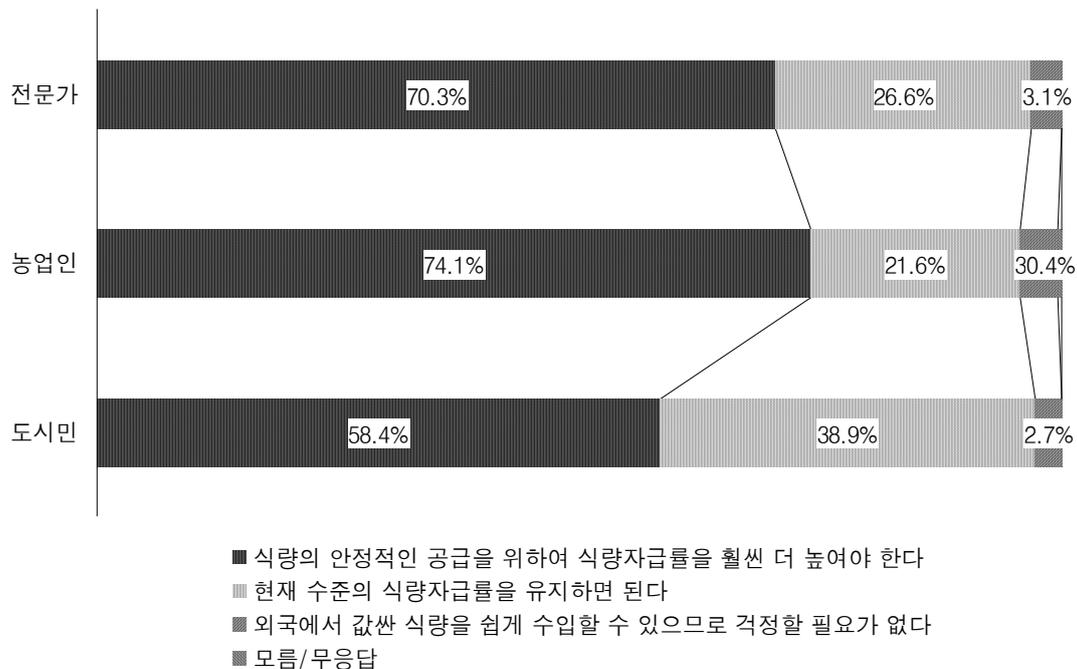


2.5. 식량자급률 중요성 인식 농업인, 전문가, 도시민 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률을 현재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견해는 농업인 74.1%, 전문가 70.3%, 도시민 58.4%로 나타나 농업인 및 전문가가 식량자급률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2006년 조사결과에 비해 도시민은 1.1%p 감소한 반면, 농업인은 5.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도시민들의 식량자급률 중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식량자급률 유지 수준에 대한 견해



2.6. 도시민과 전문가 농업·농촌문제 인식차이 뚜렷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업·농촌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도시민 비율은 2008년⁴⁾ 73.9%에서 2009년 87.4%로 13.5%p 증가

4) 2008년 10월 실시한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결과

하였다.

농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도시민 61.1%가 동의한데 반해 전문가는 23.4%만 동의해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소득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도시민 79.5%가 동의해 전문가 68.8%보다 높았으며, 반면 농업·농촌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낼수 있다는 견해에는 도시민의 절반정도인 52.3%가 동의하였으며, 전문가는 76.6%가 동의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2. 농업·농촌관련 인식 차이

단위: %(명)

구 분	2008년*		2009년				
	도시민		도시민		전문가		
	동의	동의안함	동의	동의안함	동의	동의안함	무응답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업·농촌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73.9	26.0	87.4	12.6	81.3	15.6	3.1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47.9	52.1	43.4	56.6	70.3	26.6	3.1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83.0	17.0	79.7	20.3	92.2	6.3	1.6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다	39.0	60.9	46.3	53.6	28.1	70.3	1.6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68.6	31.4	71.3	28.7	59.4	39.1	1.6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18.2	81.8	22.4	77.6	3.1	95.3	1.6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54.2	45.8	52.3	47.7	76.6	20.3	3.1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소득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82.1	17.9	79.5	20.5	68.8	29.7	1.6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농지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	-	61.1	38.9	23.4	73.4	3.1
농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형 위주의 농업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	-	77.3	22.7	46.9	50.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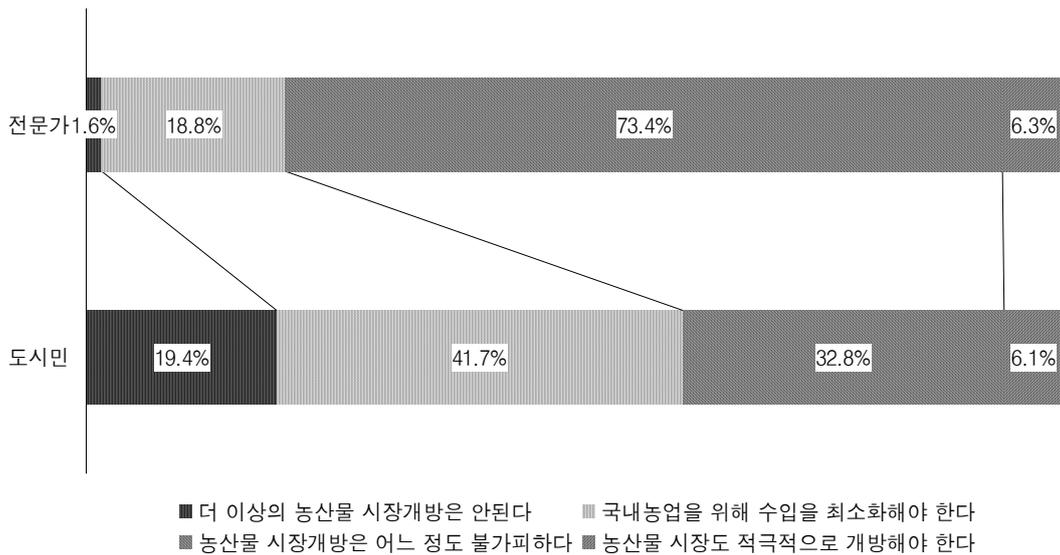
* 2008년 10월 실시한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

2.7. ‘농산물 시장 보호해야’ 도시민 61.1%, 전문가 20.4%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해 더 이상 개방은 안된다거나 수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장보호 의식이 도시민은 2006년 60.7%, 2009년 61.1%로 10명 중 6명 정도가 농업보호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집단은 20.4%만 보호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7명 (73.4%)은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해 전문가 집단이 좀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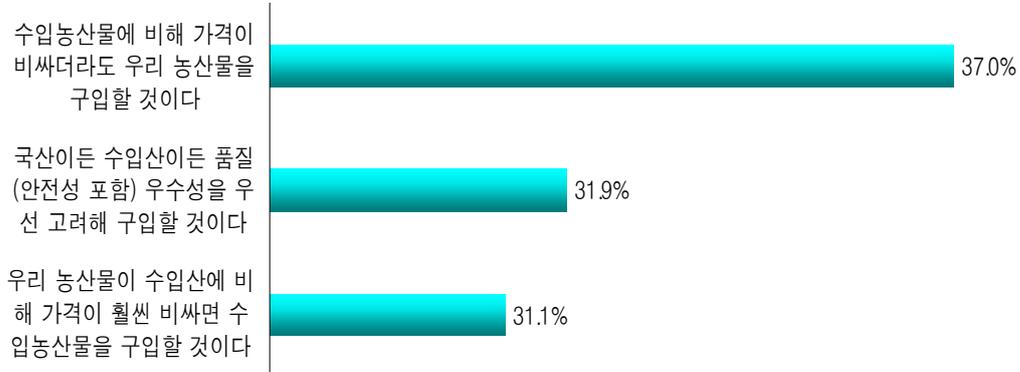
2.8. 도시민 63%, 농산물 원산지보다 품질·가격 보고 구입

도시민들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시 농산물 구입 계획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0%가 가격과 관계없이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지지도가 2007년보다 3.3%p 증가하였다.

반면, 가격 여하에 따라 수입농산물 구입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이 31.1%, 국산이든 수입이든 품질을 우선해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31.9% 등

으로 집계되어 도시민 60% 이상이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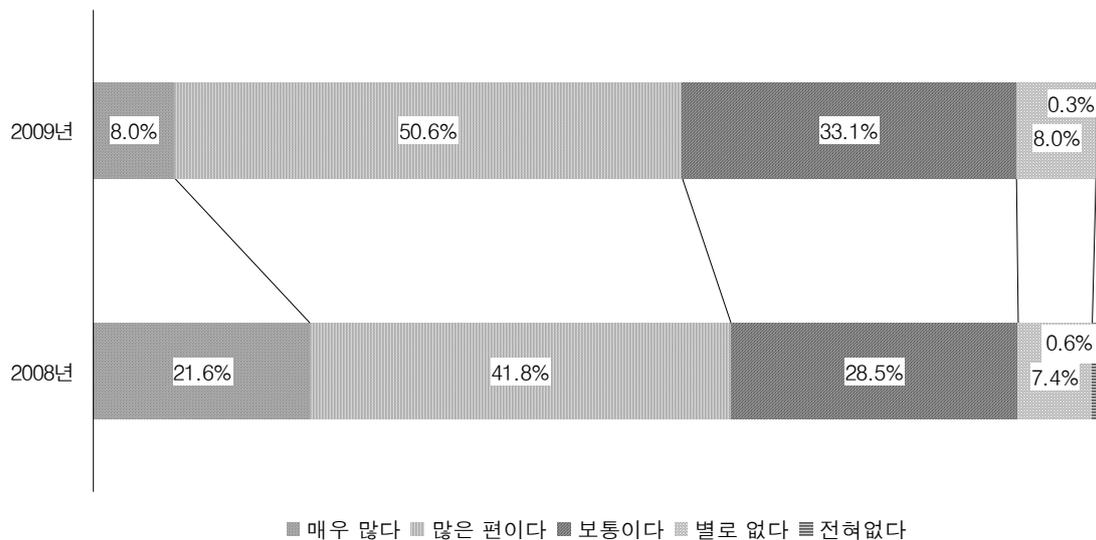
그림 6. 도시민의 우리농산물 지지도



2.9. 도시민 58.6% “농업·농촌 다원적기능 인정”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가치 인식에 대해서는 도시민 58.6%가 매우 또는 많은 편이라고 응답해 도시민 2명 중 1명은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63.5%보다는 4.9%p 낮아졌다.

그림 7.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가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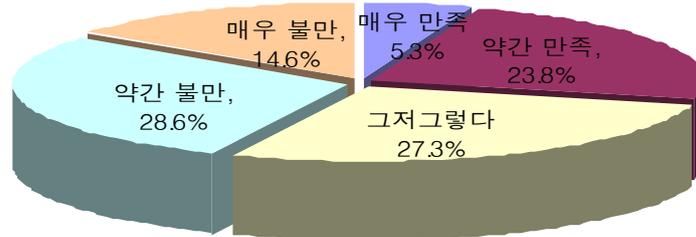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비율이 전년(40.5%)보다 9.8%p 상승한 50.3%로 나타나 국민 2명 중 1명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0. ‘올해 농사 만족’ 29.1%, 농촌생활여건 만족도 상승세

올해(2009년) 농사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29.1%로 나타났으며, 43.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 악화’(44.0%), ‘소득 감소’(22.5%), ‘정부의 관심과 지원 감소’(15.1%), ‘농산물 수입 증가’(14.3%) 순으로 꼽았다.

그림 8. 농업인 올해(2009년) 농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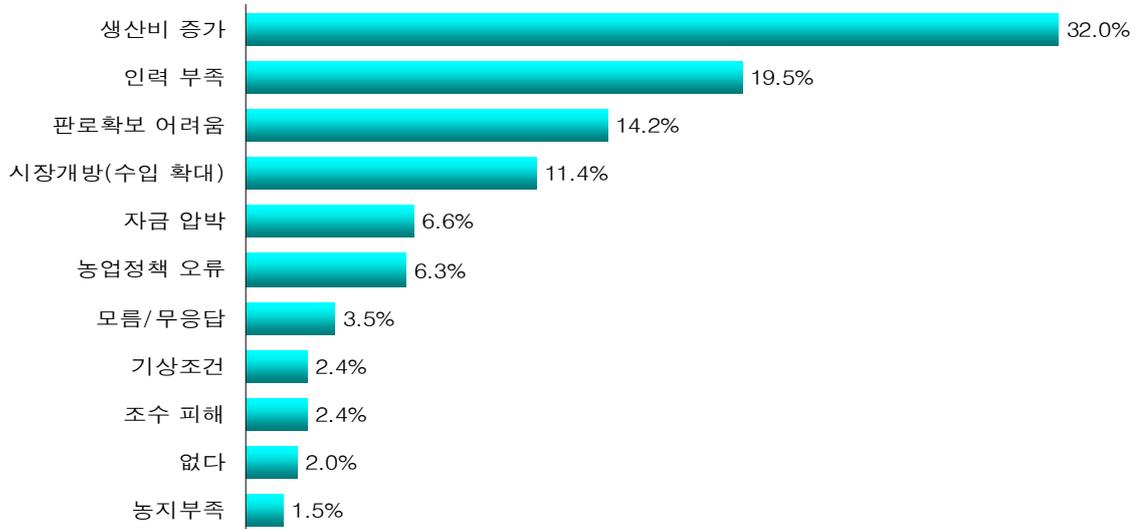
농업인들의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는 매년 상승해 2006년 16.5%, 2008년 22.7%, 2009년 25.6%로 나타났다.

불만족 요인으로는 ‘도시와 비교한 생활환경 열악’(36.3%), ‘복지 미흡’(19.1%),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11.8%), ‘교육여건 열악’(10.8%), ‘문화시설 부족’(10.5%) 순으로 나타났다.

2.11. 농가경영 위협요인 ‘생산비 증가’, ‘인력 부족’ 순

농업인들은 최근 가장 큰 농가경영 위협 요인을 생산비 증가(32.0%), 인력 부족(19.5%), 판로확보 어려움(14.2%), 시장개방과 수입 확대(11.4%) 순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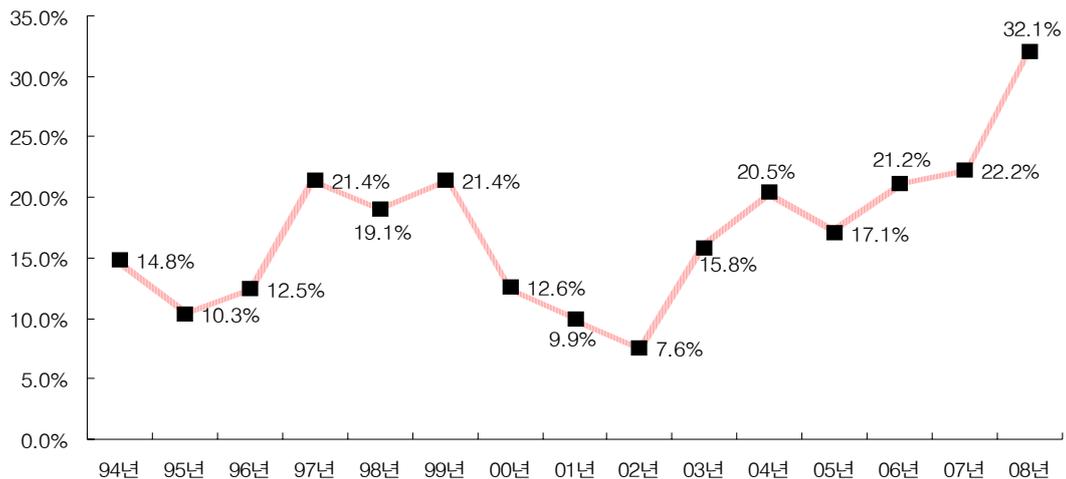
그림 9. 농가경영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



2.12. 농사 직업만족도 30%대 첫 진입, 생활수준 만족도 상승세

UR 출범 이후 등락을 거듭해 오던 농업 종사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2002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유지해 2009년도에는 32.1%로 전년보다도 9.9%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그림 10.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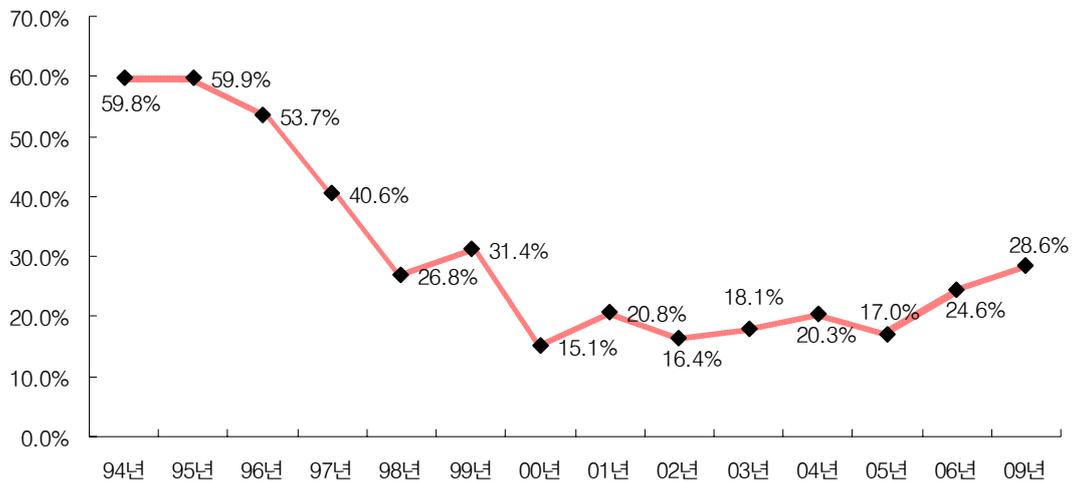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말 실시하는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측정항목을 포함하여 연도별로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불만족한다는 39.4%의 농업인은 불만요인으로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48.2%)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2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을 불만족으로 꼽은 비율이 2006년 10.4%, 2008년 14.5%, 2009년 20.5%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5년 전에 비해 올해(2009년)의 ‘농촌 생활수준’ 변화 인식도 긍정적인 인식(매우 또는 약간 좋아졌다)이 2006년 24.6%에서 2009년 28.6%로 상승하였다.

그림 11. 농업인의 농촌생활 수준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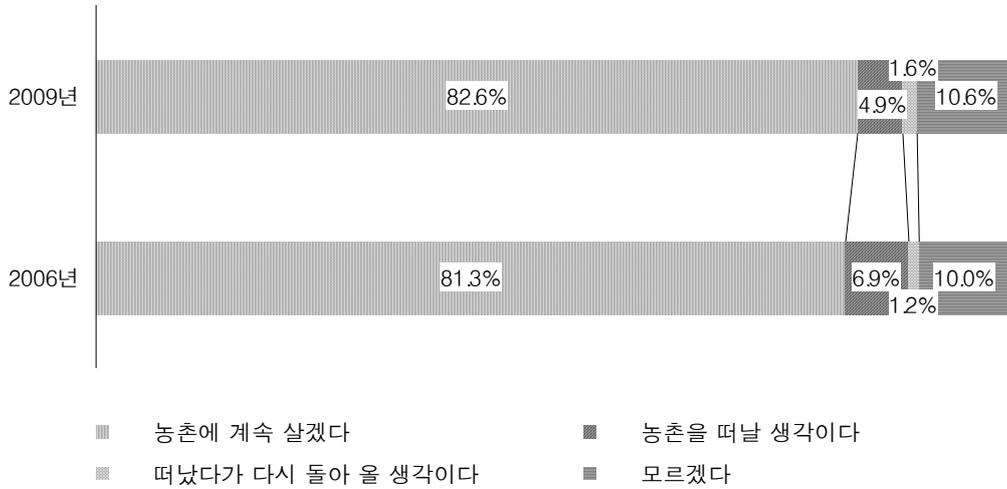


2.13. ‘자녀에게 영농승계’ 12.7%로 소폭 상승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008년 8.0%에서 12.7%로 상승하였다. ‘승계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008년 58.4%에서 45.4%로 다소 낮아졌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1.3%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살 계획이라는 응답 역시 82.6%로 전년 81.3%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농업인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농업인의 재촌 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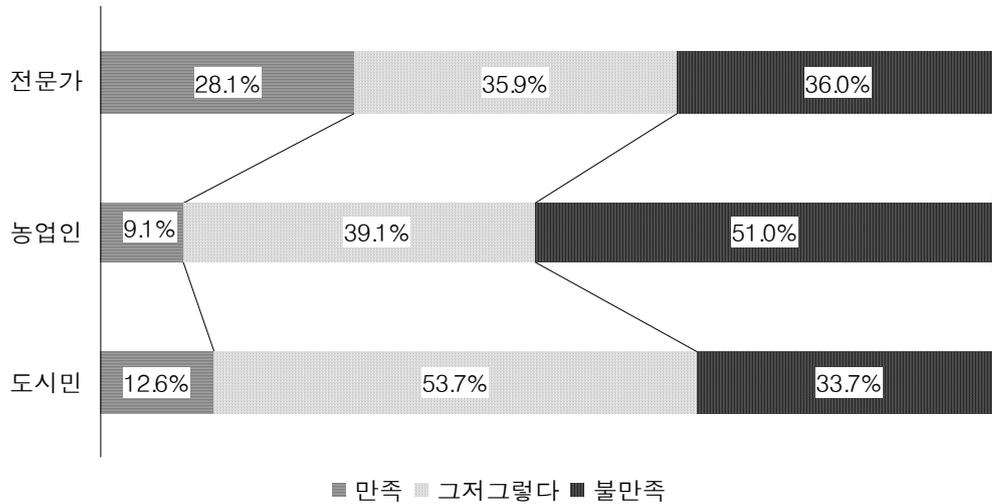
3.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와 요구

3.1.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 만족도 전문가, 도시민, 농업인 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또는 대체로)는 응답은 전문가 28.1%, 도시민 12.6%, 농업인 9.1% 순으로 집계되어 전문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긍정평가 비중이 높았다.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농업인(51.0%), 전문가(36.0%), 도시민(33.7%)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평가는 농업인의 경우 집권 1년 차인 2008년 10월 조사결과(5.6%)와 비교해 만족도가 3.5%p 상승했으나, 2008년 같은 기간 조사한 새정부의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26.4%)정도에는 못미치고 있다.

그림 13.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 만족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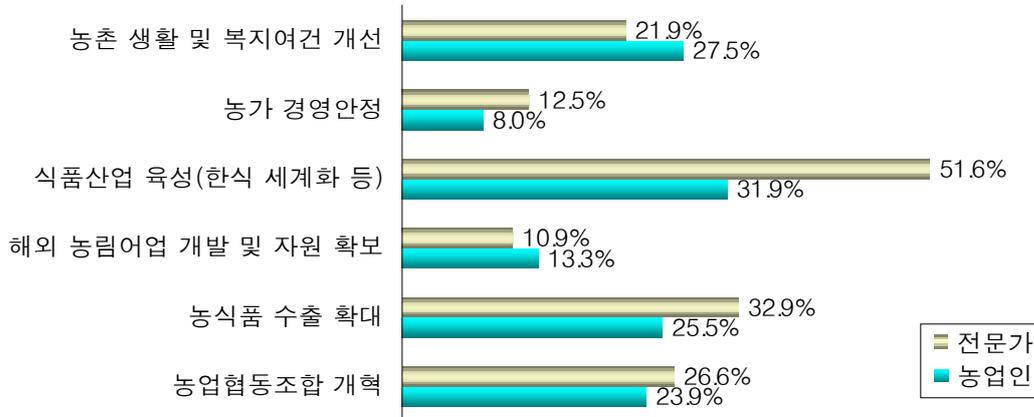
3.2. 식품산업 육성 ‘성과’, 농가경영 안정 정책은 ‘미흡’

2009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농업정책별 성과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육성(농업인 31.9%, 전문가 51.6%), 농식품 수출확대(농업인 31.3%, 전문가 25.5%) 순으로 정책 성과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로 꼽았다.

반면, 농가 경영안정, 해외농림업개발, 협동조합, 농촌생활 및 복지여건 개선 정책 4개 분야는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은 분야로 분석되었다. 이 중 특히 농가 경영안정 분야는 성과가 없다는 응답이 성과가 있다는 응답 비율보다 뚜렷이 높게 나타나(부정평가가 농업인 43.3%p, 전문가 26.5%p 높음)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최근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개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아(부정평가가 농업인 12.9%p, 도시민 3.1%p 높음) 아직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평가도 상당수 있었다.

그림 14. 주요 농업정책 성과에 대한 인식(매우 큰 성과+ 어느정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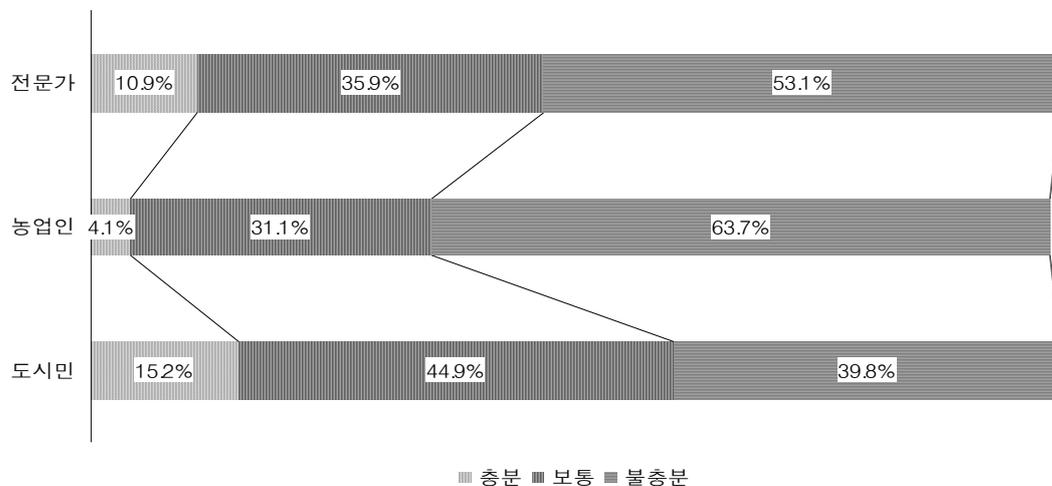


3.3. 전문가 과반수 이상 “농업·농촌 정부 관심과 지원 불충분”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 및 지원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충분 또는 충분한 편’이라는 응답이 도시민 15.2%, 전문가 10.9%, 농업인 4.1%로 나타난 반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농업인 63.7%, 전문가 53.1%, 도시민 39.8% 순으로 나타나 그룹 간 인식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인식은 도시민의 경우 충분하다는 응답이 2008년 조사결과(21.4%)와 비교해 6.2%p 감소한 것으로 도시민도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5.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 수준 인식(무응답 제외)



3.4. 투자 확대분야로 농업인은 ‘연금지원’, 전문가는 ‘농산물 안전성’ 꼽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로 농업인과 전문가에게만 질문한 농업·농촌 정책 중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에 대해 농업인은 연금지원(9.7%), 직접 지불제(9.6%), 시설현대화(9.4%)를 꼽았다.

표 3. 농업·농촌 투자 확대 및 축소 항목에 대한 견해(복수 응답)

단위: %(명)

문항	농업인		전문가	
	투자 확대	투자 축소	투자 확대	투자 축소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	8.8(160)	5.7(104)	0.8(1)	21.1(27)
②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	4.6(83)	13.3(241)	5.5(7)	15.6(20)
③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지원	9.4(171)	5.9(106)	3.9(5)	12.5(16)
④ 전문농업인력 육성	7.1(129)	5.7(103)	17.2(22)	-
⑤ 농업부문 연구개발	3.4(61)	2.0(36)	13.3(17)	-
⑥ 친환경농업 육성	5.9(106)	4.6(83)	4.7(6)	3.1(4)
⑦ 농산물 안전성·고품질화 지원	7.7(140)	2.8(50)	18.0(23)	1.6(2)
⑧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7.6(137)	3.2(57)	3.9(5)	1.6(2)
⑨ 도매시장 등 소비지 유통혁신	5.2(94)	4.5(82)	1.6(2)	8.6(11)
⑩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	9.6(173)	6.2(112)	5.5(7)	10.9(14)
⑪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지원	4.5(82)	3.4(61)	4.7(6)	-
⑫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	3.5(64)	9.7(176)	8.6(11)	5.5(7)
⑬ 마을 정비 등 농촌지역 개발	2.8(50)	7.5(135)	3.1(4)	7.8(10)
⑭ 교육여건 및 의료서비스 확충	4.8(87)	2.6(47)	6.3(8)	1.6(2)
⑮ 농업인연금 지원 등 보험료 부담경감	9.7(175)	2.7(48)	3.1(4)	3.9(5)
모름/무응답	5.5(100)	20.5(371)	-	6.3(8)
합계	100.0(1,812)	100.0(1,812)	100.0(128)	100.0(128)

전문가 그룹은 농산물 안전성(18.0%), 전문농업인력 육성(17.2%), 농업부문 연구개발(13.3%) 순으로 응답하여 농업인과의 견해 차이를 보였다.

축소해야할 분야로 농업인은 영농규모화(13.3%), 농외소득 증대(9.7%) 순으로 꼽았고, 전문가는 생산기반 정비(21.1%), 영농규모화(15.6%) 순으로 꼽았다. 농업인과 전문가 공통으로 영농규모화를 위한 투자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에 ‘소득안정’, ‘인력육성’ 중요

중장기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도시민은 농가소득 안정(24.24%)과 후계인력 육성(16.6%)을, 농업인은 농가소득 안정(55.2%)과 생활여건 개선(12.0%)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는 후계농업인 육성(26.6%)과 농가소득 안정(23.4%), 생활여건 개선(18.8%) 순으로 응답해 인력육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표 4.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에 가장 중요한 정책

단위: %(명)

구 분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후계농업인 육성	16.6(248)	10.5(95)	26.6(17)
농가소득 안정	24.4(367)	55.2(500)	23.4(15)
적극적인 귀농지원	15.5(233)	4.8(43)	1.6(1)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확대	10.6(159)	6.2(56)	4.7(3)
농촌지역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15.2(228)	12.0(109)	18.8(12)
기술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15.9(239)	6.7(61)	20.3(13)
외부 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1.5(22)	3.6(33)	1.6(1)
기타	0.3(5)	0.6(5)	3.1(2)
모름/무응답	-	0.4(4)	-
합계	100.0(1,500)	100.0(906)	10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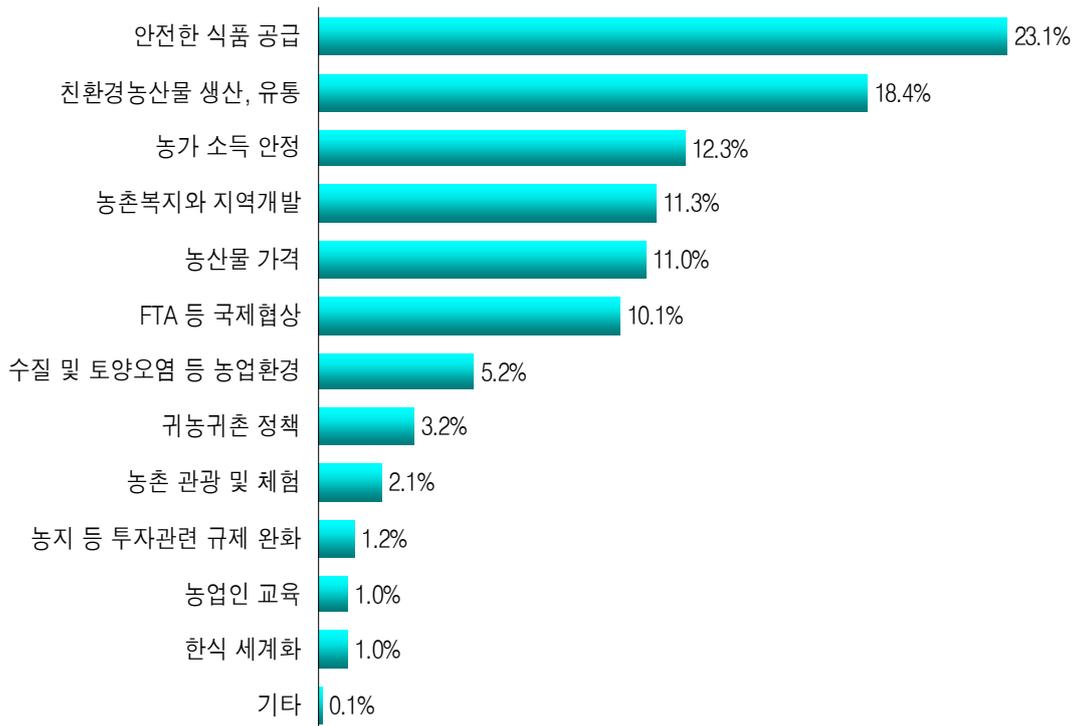
3.6. 도시민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은 ‘안전한 식품 공급’

도시민에게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 분야는 안전한 식품 공급(23.1%),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18.4%), 농가소득 안정(12.3%), 농촌복지와 지역개발(11.3%), 농산물 가격(11.0%)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중 평소에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명 중 3.4명(33.9%)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결과보다는 1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들 중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3.4%(많다 3.9%, 대체로 많은 편 39.5%),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3.9%(별로 관계없다 44.7%, 전혀 관계없다 9.2%)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림 16. 도시민이 최근 가장 관심 갖고있는 농업정책



4. 식품안전과 소비, 농촌관광 수요

4.1. 도시민 10명 중 6명 “국산농산물 안전성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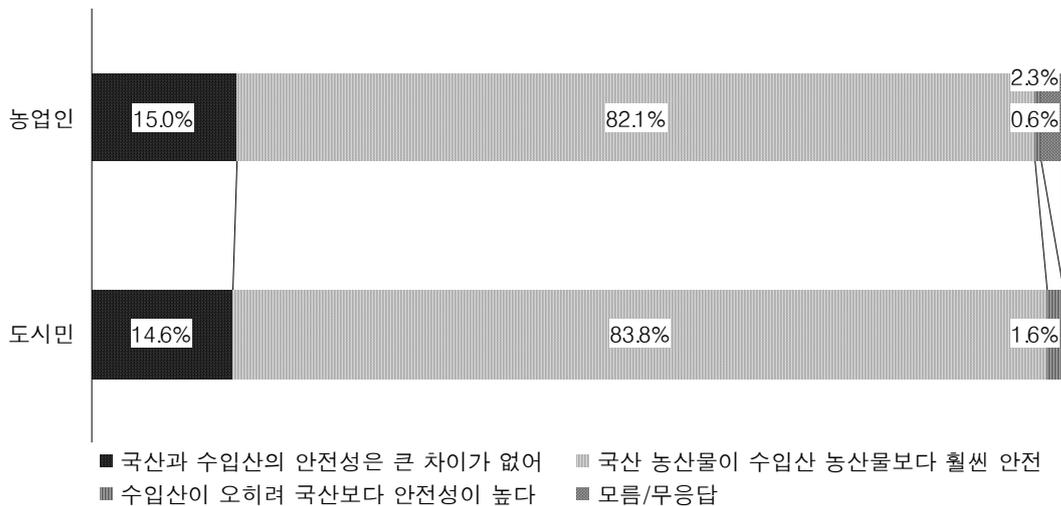
도시민의 국산농산물 신뢰 수준은(매우 신뢰+신뢰하는 편) 62.5%로 2006년 조사결과 63.0%와 비교해 오히려 낮아졌고, 2008년과 비교해서는 소폭(6.7%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농업인 83.4%는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안전(매우 안전+ 안전한 편)하다고 응답하여 소비자인 도시민의 인식과 20.9%p의 격차를 보여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산농산물과 중국산과 개도국의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비교에서는 국산 농산물이 수입산 농산물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는 인식이 도시민 83.8%, 농업인 82.1%로 조사되어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였다.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은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도시민 14.6%, 농업인 15.0%로 나타났다.

그림 17.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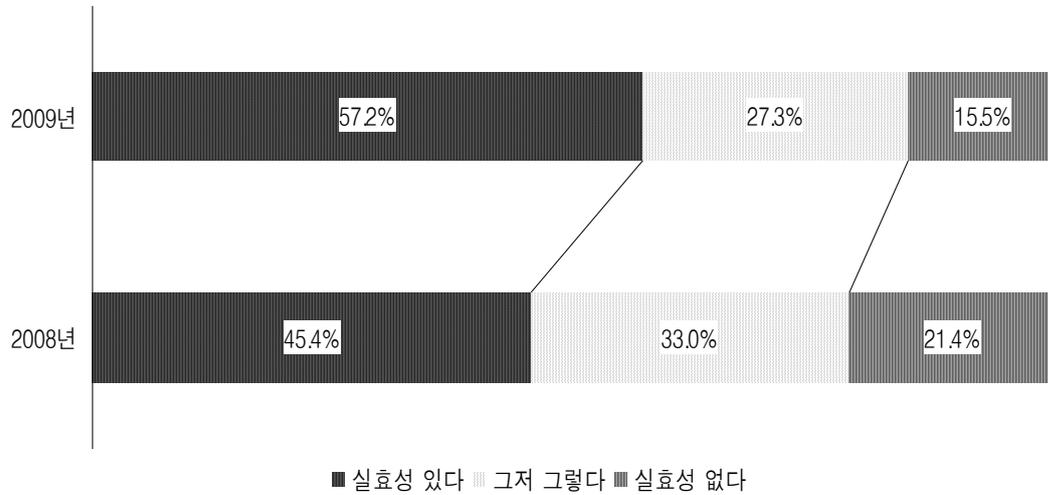


4.2.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효성 있다” 11.8%p 상승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8년 7월에 확대 시행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도시민 57.2%가 실효성 있다(매우+어느 정도)고 응답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15.5%)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시행 첫해인 2008년 조사결과 45.4%에 비해서도 11.8%p 상승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정책 실효성에 대해 도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18.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의 실효성 인식(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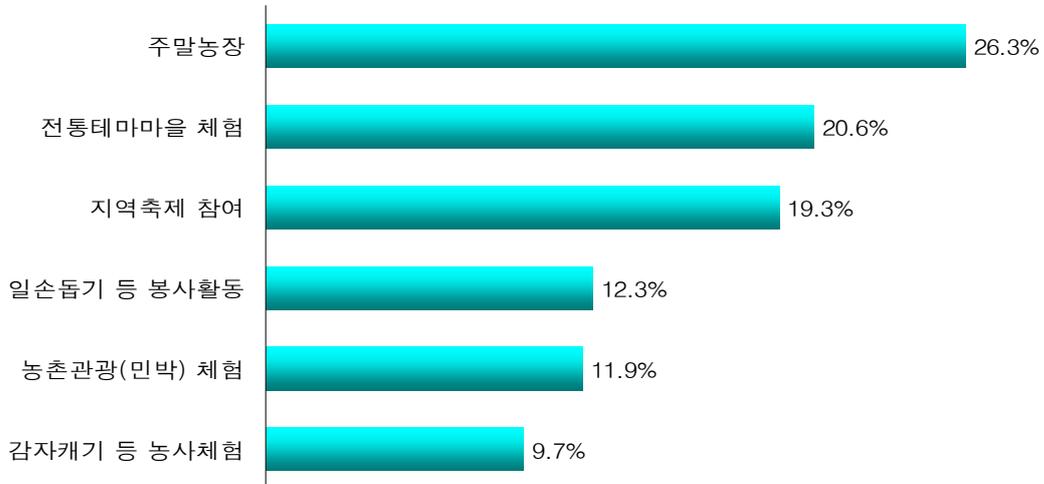
4.3. 농촌관광 만족도 46.5%, '숙박과 취사 불편' 지적

지난 1년간 1회 이상 농촌관광을 경험한 도시민은 응답자의 24.6% 불과했으며, 이들 중 46.5%만 만족했다고 응답해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 시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는 숙박과 취사 불편 29.6%, 체험활동 부족 18.1%, 교통 불편 15.6%, 주변환경 청결 미흡 13.9%, 비싼 요금 11.0% 순으로 나타나 관광여건 개선이 요구되었다.

앞으로 농촌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은 주말농장 26.3%, 전통테마마을 체험 20.6%, 지역축제 참여 19.3%, 일손돕기 12.3%, 민박체험 11.9% 순으로 나타나 주말농장 등 체험 위주의 활동에 대한 잠재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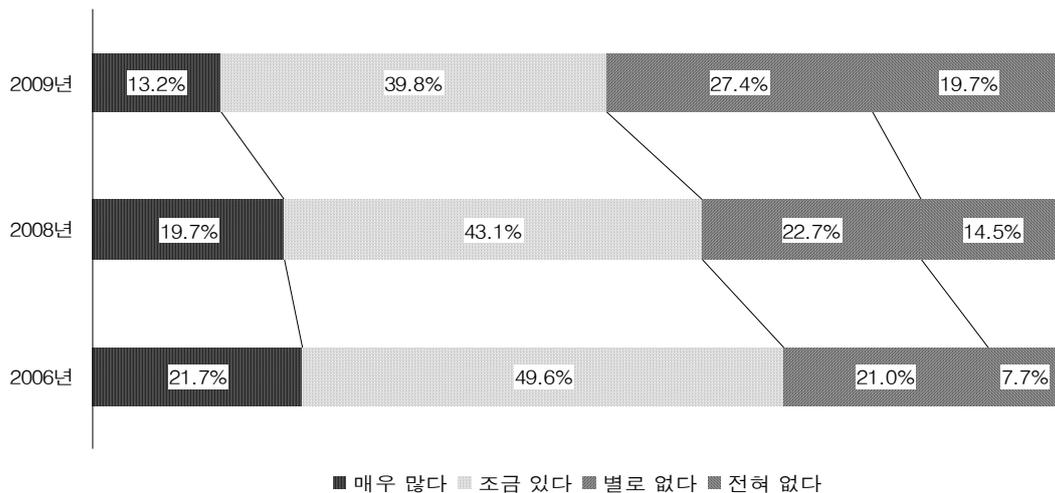
그림 19. 농촌지역에서 하고 싶은 활동(도시민)



4.4. 도시민 2명 중 1명은 '귀농 의향 있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많다 13.2%, 조금 있다 39.8%로 답해 도시민 응답자의 53.0%가 귀농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6년 71.3%, 2008년 62.8%에 이어 매년 귀농 의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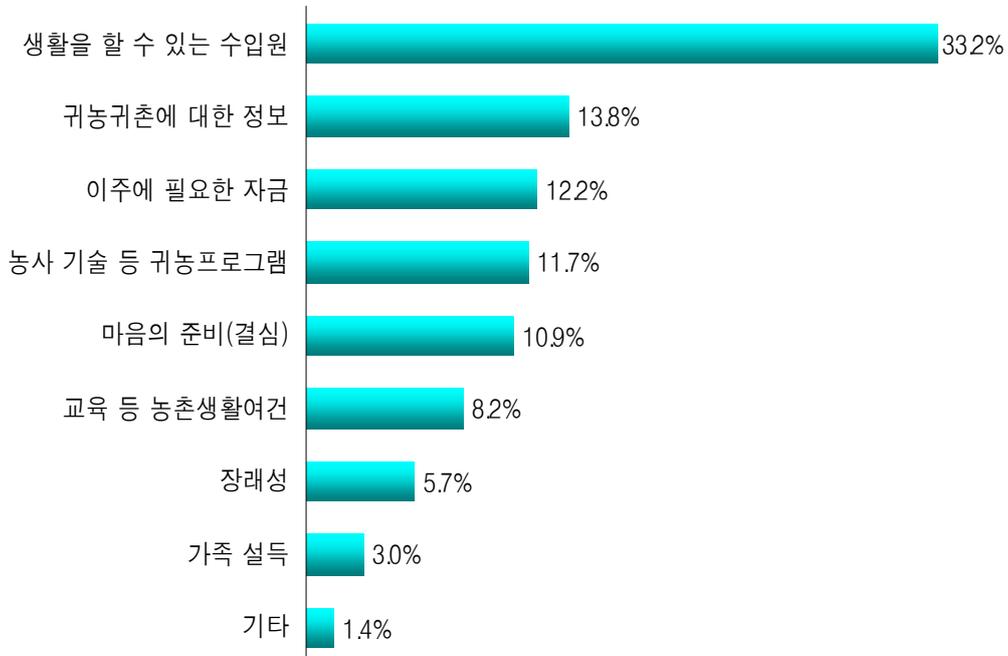
그림 20. 도시민의 귀농 의향



귀농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 중 5년 이내에 귀농할 것이라는 응답은 3.8%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8.2%로 나타나 실현 정도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입원’이라는 응답이 33.2%로 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13.8%), ‘이주에 필요한 자금’(12.2%), ‘귀농프로그램’(11.7%) ‘마음의 준비’(10.9%)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생활 여건’(8.2%) 등도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21. 귀농에 필요한 조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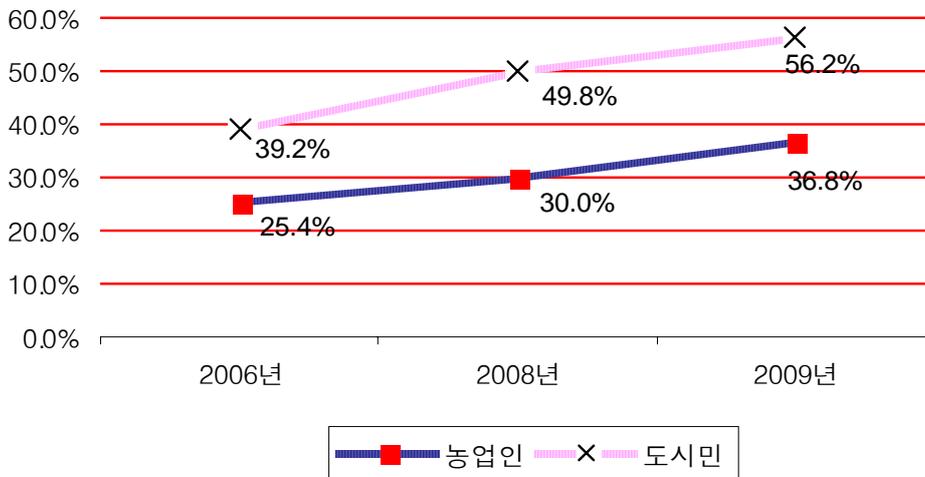
5. 주거환경과 복지수준 인식

5.1. 거주지 만족도 인식 도시민 - 농업인 19.4%p 격차

현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뚜렷해 도시민은 2006년 39.2%, 2008년 49.8%, 2009년 56.2%로 집계되었으며, 농업인은 같은 기간 각 25.4%, 30.0%, 36.8%로 집계되었다.

다만, 두 그룹 간 인식차이는 커져 현 거주지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만족도는 2006년 13.8%p에서 2009년 19.4%p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 거주지 주거환경 만족도 인식 변화(매우 만족+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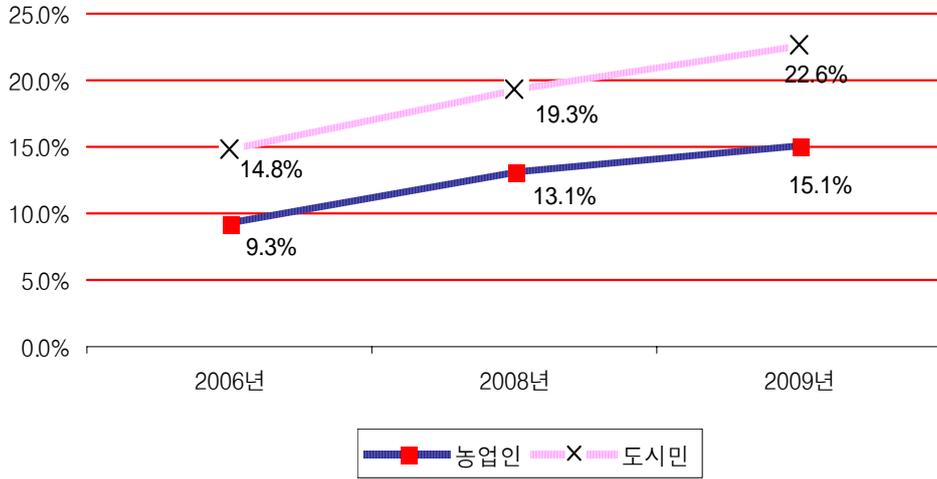


5.2. 농업인 삶의 질 만족도 도시민에 비해 7.5%p 낮아

나와 우리가족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매년 상승해 삶의 질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도시민은 2006년 14.8%, 2008년 19.3%, 2009년 22.6%로 나타났고, 농업인은 같은 기간 각 9.3%, 13.1%, 15.1%로 집계되어 상승세를 보였다.

삶의 질 수준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만족도 격차는 2006년 5.5%p에서 2009년 7.5%p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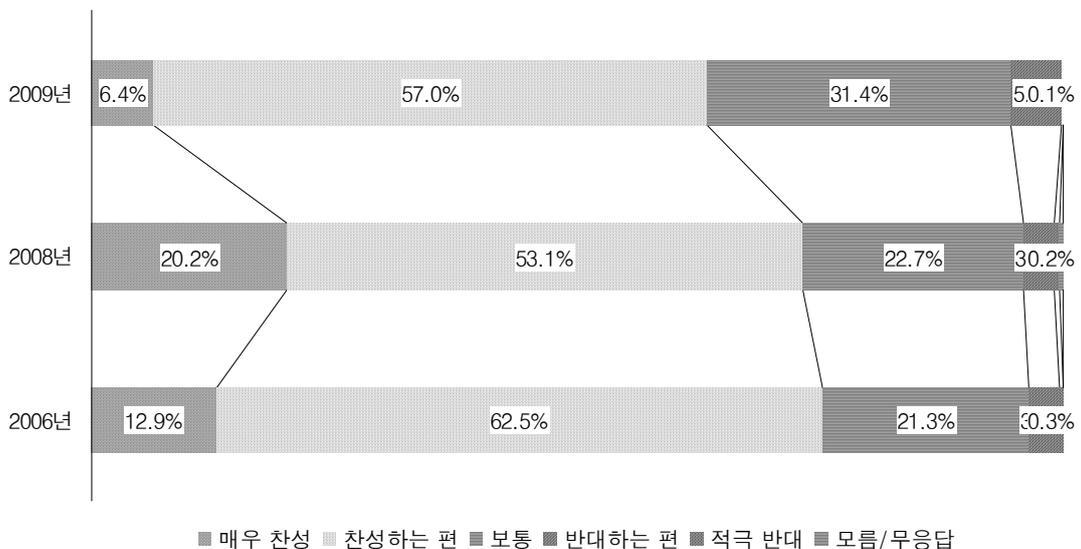
그림 22.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매우 높다+높은 편)



5.3. 도시민, 농촌 복지예산 증액 찬성 63.4%로 4년새 12.0%p 감소

농촌복지를 위해 관련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도시민은 2006년 75.4%에서 점차 줄어 2009년 63.4%로 4년새 12.0%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농촌 복지예산 증액 찬성 여부(도시민)



6. 시사점

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조사에서 농업인과 도시민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정책 방향과 요구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인식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포함한 전문가 그룹 조사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위주의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견해를 정책에 균형있게 수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와 역할 인식은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의지를 갖고 있는 도시민 비율은 수 년째 50%선에 머물러 있어 농업·농촌문제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전문가 2명 중 1명 정도는 10년 후 한국농업과 농촌생활을 희망적으로 전망하였으나, 농업인은 이의 절반 정도에 그쳐 중장기 비전 제시를 통해 긍정적인 의식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도시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우리 농산물 시장 보호론을 옹호했지만 전문가 그룹은 20.4%만 보호론에 찬성해 큰 인식차이를 보였다. 도시민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는 50.5%만 찬성해 적극적인 지지 확보를 위한 홍보강화 등 노력이 요구된다.

농업인들의 직업과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직업만족도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넘었고,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만족도 역시 꾸준히 상승해 28.6%를 기록하는 등 수년간 긍정적인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보인다.

거주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에서 도·농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그 차이가 전년도와 비슷한 각 19.4%p, 7.5%p를 나타냈으나,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9년 중점 추진된 농정에 대한 평가에서는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수출확대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있는 분야로 꼽혔고, 농가 경영안정에 관한 정책은 가장 성과가 낮은 분야로 지목돼 경영안정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었다.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농업인은 직불제 등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에 관심을 보인 반면, 전문가는 인력 육성 등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주문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투자를 축소해야 할 분야로는 농업인이나 전문가 모두 전업농을 위한 영농규모화 지원을 꼽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도시민 2명 중 1명은 귀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 중 5년 내 구체적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8%에 지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적다고 평가된다. 귀농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귀농 조건으로 들고 있는 수입원(33.2%)과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13.8%), 이주비용(12.2%), 귀농 프로그램(11.7%)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인식차이가 뚜렷해 이를 감안한 정책수립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는 직업과 생활수준 만족도가 2002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10년 후 농업과 농촌생활 수준 전망은 긍정지표가 20%대에 머물러 비관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인들에게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제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발행 목록

2009년

- 제63권 농업·농촌에 대한 2009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 제62권 2009년산 쌀 증산에 따른 가격 및 소득 분석 (김정호, 최익창)
- 제61권 식물공장의 동향과 전망 (김정호)
- 제60권 일본의 정권교체와 농정전망 (김태곤)
- 제59권 최근 산지 소값 동향과 쇠고기 가격 전망 (허덕, 이정민, 이형우)
- 제58권 최근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7권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2009~2019 (조영수, 박상미)
- 제56권 농림사업의 연령제한 실태와 개선방안 (최경환)
- 제55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영향분석 (허덕, 이정민, 이형우)
- 제54권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계의 인지도 조사 결과 (김창길, 주현정)
- 제53권 국제곡물가격이 곡물가공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시차 (김태훈, 김배성)

2008년

- 제52권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 제51권 미국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어명근)
- 제50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피해 계측 (우병준, 이형우, 황윤재, 김진년)
- 제49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 영향과 시사점 (허덕, 이정민)
- 제48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양계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허덕, 우병준, 이형우)
- 제47권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허덕, 김현중)
- 제46권 유가상승이 시설채소 농가에 미치는 영향 (정은미, 정학균, 김수림, 윤선희)
- 제45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2007년

- 제44권 사육 여건 변화가 양돈소득에 미치는 영향 (허덕, 정민국, 김현중)
- 제43권 금년 김장철 채소 가격 및 김장 수요 전망 (박기환, 송성환)
- 제42권 해외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시사점 (신용광, 황윤재)
- 제41권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김태영, 이상건)
- 제40권 최근 소값 동향 분석 (허덕, 송주호, 정민국, 이정민)
- 제39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 제38권 미국 정부의 2007년 농업법 제안과 시사점 (임송수)
- 제37권 기후변화협약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 제36권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김수석, 박석두)

2006년

- 제35권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박대식, 마상진)
- 제34권 DDA 협상 중단의 의미와 전망 (임송수)

- 제33권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김병률, 김배성, 조영수, 이용호)
- 제32권 국내외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 실태 (김창길, 김태영)
- 제31권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최세균, 허주녕, 박성진)
- 제30권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 (최세균)

2005년

- 제29권 김치 안전성 파동과 김장 수요 전망 (송성환, 김연중)
- 제28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개최와 과제 (김영훈)
- 제27권 쌀 공공비축제 도입과 수확기 시장안정 대책 방향 (박동규)
- 제26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 (강창용, 교육)
- 제25권 중국 위안화 절상이 국제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배성, 최정섭)
- 제24권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 (김정호)
- 제23권 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 (최세균, 허주녕)
- 제22권 농업인의 의식 변화와 농정 현안에 대한 인식 (김동원, 박혜진)
- 제21권 친환경과실 소비 실태 및 전망 (김경필, 박미성)
- 제20권 독일과 프랑스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김수석)
- 제19권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본 2005년 북한의 농정전망 (권태진)
- 제18권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기회, 중국 (권오복)

2004년

- 제17권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안 (박석두, 송미령, 김수석, 김홍상)
- 제16권 쌀농가 소득·경영안정 직불제 도입과 양곡관리 제도 개편 (박동규)
- 제15권 2004년산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김명환, 김혜영)
- 제14권 쌀 협상 시한에 관한 견해 분석 (임송수)
- 제13권 국제유가 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 김배성, 정학균)
- 제12권 기업농의 조건: 가능성과 전망 (김정호)
- 제11권 미 광우병 발생 이후 쇠고기 소비 변화 (신승렬, 송주호, 김철민)
- 제10권 농업협상 기본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임송수, 서진교, 김상현, 임소영)
- 제9권 쌀 농업의 규모 효과와 구조 정책 (김정호)
- 제8권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김태곤, 정정길)
- 제7권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비교 (김창길, 김태영)
- 제6권 최근 가축질병 발생이 육류 소비에 미친 영향 분석 (신승렬, 송우진, 이형우)

2003년

- 제5권 수요차별 수입쌀 구매의향 전망 (이계임, 김민정)
- 제4권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박성재, 황의식)
- 제3권 미국과 EU의 가격·소득지정정책 (김태곤)
- 제2권 유럽연합의 2003년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임송수)
- 제1권 쌀 수매제도의 소득지지효과 (김명환)